

안보통일센터

「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」 평가  
: “[목표 5]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”를 중심으로

2017. 7. 26



SECURITY FOCUS

안보포커스



재단법인  
여의도연구원  
THE YEUIDO INSTITUTE

### 【3대 국정전략】

- ①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
- ②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
- ③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

※ 3대 전략 실행을 위한 16개 국정과제, 71개 실천과제 제시

## 《종합평가》

### 【전략1】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

#### ☞ 안이한 안보의식과 안보 포퓰리즘

- 전반적으로 안보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, 우리 안보 현실에 비추어 실천성에 무리가 있는 안보 포퓰리즘 정책이 다수 제시되고 있음
- 북한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·장기적 대책 강구 노력은 있으나, 북한의 핵·미사일 사용에 대한 단기적·즉각적 대비책 결여
- 兵 복무기간 18개월은 북한發 안보위기 심화 현실과 우리사회의 저출산 인구구조, 병사의 숙련도 등 감안時 무리

### 【전략2】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

#### ☞ 남북관계 해결의 조급증과 과욕 우려

-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국정과제의 실질적 중점을 ‘남북간 화해협력’에 두고 있어, ‘한반도 비핵화’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
- 북한 핵·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및 국제사회의 對北제재국면 지속 등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어, 同 국정 전략의 실행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됨

- 이에 따라, 남북관계에 대한 文정부의 조급증과 과욕이 잘못된 對北 메시지 발신이 우려됨

### 【전략3】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

#### ☞ 현란한 레토릭으로 포장한 전혀 새롭지 않은 정책의 나열

- 양자외교와 다자외교의 병행을 통해 안보·경제협력을 추진하려는 文정부의 외교는 중견국 반열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취해야 할 외교방향이므로, 박근혜정부의 외교방향과 큰 차이가 없음
- 실천과제를 보면 현란한 레토릭(修辭)으로 포장돼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주변 4국과의 관계 규정에 있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음

## 《국정과제별 평가》

### 【전략1】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

#### [85]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(국방부)

- ‘한국형 3축체계’의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는 바람직하며, 이에 더하여 핵·미사일 방호시스템의 구축 또한 시급함
- 북한의 핵·미사일 공격에 대한 단기적 대비책으로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·공동운영 및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·상시배치 추진 등 ‘한반도 핵균형’ 대책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음

#### [86]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전환 (국방부)

- 전작권 전환문제는 당초 계획안에 ‘임기내 전환’으로 된 것을 발표 직전 ‘조기전환’으로 수정, 文정부의 안보 포퓰리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
- 전작권 조기전환은 文정부의 ‘책임국방’의 대표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나, 전작권 전환을 ‘자주’ ‘책임’ 등의 명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안보·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·미간 긴밀한 협의와 철저한 전환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돼야 할 것임

#### [87]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(국방부)

- 상비병력 50만명으로의 감축 및 兵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등은 안보위기 심화 현실, 저출산 인구구조, 병사 숙련도 등 감안時 신중한 추진이 필요
  - ※ 복무기간 1개월 단축時 약 11,000명의 병력이 부족하며, 출산율 저하에 따른 연간 부족분 23,000명을 포함할 경우 최소 50,000명 이상 병력 부족사태 발생 가능(한국국방연구원 연구결과)
- 특히 심각한 저출산 인구구조로 병력자원 확보가 어려운데다, 이를 부사관과 여군 증원으로 보완時 예산 확보에 현실적 난관이 예상됨

- 아울러, 병사 숙련도 문제 발생으로 전투역량의 약화 우려
  - ※ 보병을 기준으로 병사의 숙련도가 발휘될 수 있는 최소 복무기간은 16개월이며, 18개월로 단축時 숙련된 전투수행능력 활용기간은 2개월에 불과(한국국방연구원 연구결과)

[88]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(국방부)

[89]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(국방부)

## **【전략2】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**

### **[90]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(통일부)**

- 이 과제는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위기 현실에 비추어 실제로 추진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조건의 충족이 필요함
- ‘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’ 추진 여건 조성은 노무현정부의 ‘10·4정상선언’의 합의내용을 실현하려는 것이지만, 이를 위한 NLL 재확정 기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

### **[91]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(통일부)**

- 남북연락채널 복원 등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함
- 그러나, 대북 ‘제재’의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조급하게 서두를 경우 오히려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약화시키거나 훼손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임

### **[92]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(통일부)**

- 이산가족문제는 ‘천륜의 문제’이고 또 고령이산가족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,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 또한 적극 협력할 수 있음
- 아울러, 인권은 천부적 기본권이므로 정치적 이해타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

### **[93]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(통일부)**

-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함
- 그러나, 교류협력이 민족동질성 회복 목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 존중 또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이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임

[94]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(통일부)

-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체가 정부일 경우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크므로, 이를 民意를 대변하는 국회 주도아래 민간-정부-국회 3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
- 통일교육은 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”(헌법 4조)한다는 「대한민국 헌법」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

[95]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(외교부)

- 비핵화 합의도출을 위한 2020년 시점 설정은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어 對北뿐만 아니라 미·중·일·러와의 협상에서도 자충수가 될 우려가 있음
- 한반도 ‘평화체제’는 북한 비핵화의 바탕에서 ‘비핵평화체제’로 구축되어야 함
- 文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느낌이며,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‘병행’ 추진 입장을 보이는 이면에는 비핵화 목표를 희석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
- 북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 시도는 반대하며, “...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”이라며 애매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을 위한 ‘비핵화 진전’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

### **【전략3】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**

#### **[96]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(외교부)**

#### **[97]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(외교부)**

- “한미동맹을 호혜적 **책임동맹관계**로 지속 심화·발전”시킨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, ‘책임동맹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
※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‘자주’를, 文정부에서는 ‘자주’를 ‘책임’으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보임
- 주변 4국과의 외교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, 다만 ‘실질적 한·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,’ ‘한·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,’ ‘한·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’ 등 각국과의 외교관계 설정이 혼란스러움

#### **[98]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(외교부)**

- ‘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’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‘동북아 평화협력,’ ‘신남방정책,’ ‘신북방정책’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, 전체적으로 박근혜정부의 ‘동북아 평화협력구상’과 ‘유라시아 이니셔티브’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

#### **[99]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(외교부)**

#### **[100]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(산업부)**

- 한·미 FTA 개정 또는 재협상에 앞서,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2011년 한·미 FTA 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국회에서는 한·미 FTA를 불공정 협정, 제2의 을사늑약으로 비난한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임